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1년 1월 14일 (목)

CONTENTS

-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IB 2021-01)

CONTENTS

I.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 1

II.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 12

III.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 20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장경수

발행일: 2021년 1월 14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이번 호(1월 2째주)는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 ▶인구정책 대전환, ▶모빌리티 산업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8차 노동당 대회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향후 정세를 전망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정책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제1편: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1.5(화)부터 평양에서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8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막해, 현재(1.12) 진행 중임. 대회 7일차인 1.11(월)까지 릴리스된 내용을 보면, △김정은의 경제실패 인정, △당내 군부 의석 대폭 축소, △당 규약 개정(‘선군정치’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제시), △김정은의 총비서 추대 및 조직 개편 등임. 특히, 주목할만한 내용은 1.9(토) 사업총화에서 “SLBM 핵잠수함의 공식화”를 선언한 것인데,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핵무력 고도화’에 두는 한편, 美의 레드라인을 건드려 대미협상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아울러, 남북관계도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바, 대남타격용 전술핵을 개발하겠다”는 협박성 멘트를 쏟아내고 있어, 국면전환 모멘텀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임. 이에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

제2편: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김창배 경제정책실장)

인구감소는 경제절벽, 재정고갈, 지방소멸 등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재앙. 하지만 정부의 인구대응·대책은 위기의식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안일. 사상 처음 인구감소 통계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정책전환의 시급성을 시사. ▽세금퍼붓기 출산 대책을 지양하고 결혼·출산 의욕을 고취하는 사회환경 및 구조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 적극적 이민정책 등을 통한 노동투입 감소 상쇄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주택·복지·연금 정책 정비 ▽지속가능 시장형 일자리 창출로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환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안함

제3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

모빌리티 산업은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서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두 가지 도전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념. 현재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경계가 의미 없는 파괴적 혁신이 만들어 내는 산업-생활-정부 간 상호연계의 형태로 규정됨.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2030', '모빌리티 2040'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 연결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함

1.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작성: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lee.youn.seek@ydi.or.kr)

1.5(화)부터 평양에서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8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막해, 현재(1.12) 진행 중임. 대회 7일차인 1.11(월)까지 릴리스된 내용을 보면, △김정은의 경제실패 인정, △당내 군부 의석 대폭 축소, △당 규약 개정(‘선군정치’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제시), △김정은의 총비서 추대 및 조직 개편 등임. 특히, 주목할만한 내용은 1.9(토) 사업총화에서 “SLBM 핵잠수함의 공식화”를 선언한 것인데,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핵무력 고도화’에 두는 한편, 美의 레드라인을 건드려 대미협상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아울러, 남북관계도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바, 대남타격용 전술핵을 개발하겠다”는 협박성 멘트를 쏟아내고 있어, 국면전환 모멘텀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임. 이에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1. 개요 및 현황

- 1.5(화)부터 평양에서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8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막해, 현재(1.12) 마무리 단계에 돌입¹⁾
 - 이번 대회는 2016년 제7차 대회 이후 5년 만으로, 작년 8월 19일 당 중앙위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개최를 결정한 사안
 -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2021년 1월 초에 열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은 3기의 출범, △당대회 5년주기 완성 및 신년사 연설의 부담 덜기,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黨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공고화 및 주민 결속 강화, △바이든 新행정부에 향한 ‘선제적 대미 메시지’ 제시 등

1) 同 보고서는 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월 11일(7일째)까지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한 것임.

○ 북한에서 당 대회는 “黨 사업과 黨 노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는 ‘최고 지도 기관’의 위상을 지님

- 노동당 규약에 “당대회는 당의 사업 결정, 당의 강령 및 규약 제정, 당 노선과 정책·전략·전술에 있어 기본 문제 토의·결정, 당 총비서 추대 등을 한다”고 명시

- 규약상 4, 5년에 한 번씩 열도록 했으나 1946.8月 제1차 대회 이후 불규칙하게 개최됐고, 김정일 체제에선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김정은 체제 들어 2016.5月 36년 만에 7차 대회를 개최

※ 1차 대회: 1946.8.28.~30, 2차 대회: 1948.3.27.~30, 3차 대회: 1956.4.23.~29, 4차 대회: 1961.9.11.~18, 5차 대회: 1970.11.2.~13, 6차 대회: 1980.10.10.~14, 7차 대회: 2016.5.6.~9, 8차 대회: 2021.1.5.~??

○ 7차 대회에서는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총화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명문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등을 제시

- 특히, ①김정은 당위원장 추대, ②중앙위 비서국 폐지→정무국 신설, ③중앙위 직제 변경(총비서→위원장, 비서→부위원장), ④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중앙위 위원·후보위원 개편 등도 추진

- 이번 8차 대회도 계획대로라면 사업총화 후 결정서 채택, 당 규약 개정, 폐회사 등 일정을 마쳐야 하나, 현재 다소 늦어지고 있음

• 핵심 안건인 △당 중앙위 및 당 중앙검사위 사업총화, △당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중에서 7일차(1.11)까지 마무리된 것은 사업총화와 당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임

- 일각에선 중앙위 결정서 채택까지는 초안 작성위 구성과 각계 의견 수렴·취합 및 폐회사 등이 남아 있고, 열병식도 준비 중이란 관측이 있어 대회가 당초 예상보다 좀 길어질 것으로 전망2)

〈표 1 - 1〉 제8차 노동당 대회의 당초 예상 일정(안)

	5일 개막	6, 7일 일정	8일 폐막
주요 일정	-김정은 개회사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	-당 중앙위 분야별 사업총화 보고 및 토론 -당 중앙검사위 사업총화 -사업총화 결정서 채택	-당 규약 개정 토의 및 결정서 채택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김정은 폐회사
결과 및 예상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 미달”,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	-바이든 정부를 향한 메시지 -남북관계 재개 여부 -5개년 경제발전 계획 등	-김정은, 김여정 지위 격상 -세대교체를 통한 김정은 친위체제 구축

*주: 당초 3박4일(1.5~1.8) 일정이었으나, 1.12(화) 현재까지 진행 중.

**출처: 동아일보(2021. 1. 8.) 참조.

- 따라서 **同** 보고서는 당대회 7일차인 1.11(월)까지 결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기반해 향후 정세를 전망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김정은의 경제실패 인정, △당내 군부 의석 축소, △당규약 개정, △김정은 총비서 추대 및 조직 개편 등

① 김정은의 경제실패 공식 인정

- 김정은은 1.5(화)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쏠부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경제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
- 7차 당대회 당시 “수소탄 성공”을 앞세워 자화자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개회사와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관련 문제점을 언급하며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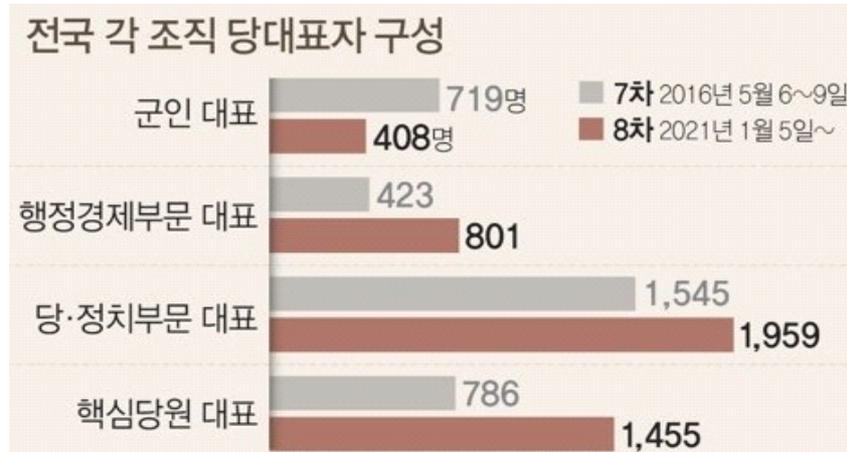
2) 1.12(화) 주요 언론에 따르면, 북한이 당대회 마무리 행사로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이는 제재 장기화, 코로나 국면, 자연재해 등 ‘3중고’의 총체적 난국 속에서 어느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자책이란 자구책을 선택
 - 특히, 과거와 달리 “결함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내부적 노선 변화로의 연동이 주목
- 그러나 김정은이 직접 나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북한이 직면한 근원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
- 현 북한의 경제난은 단기적 문제가 아닌 수십년 간의 경제 실정과 코로나19로 인한 北-中 국경봉쇄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
 - 지난 수십년간 김정은이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 채, 美 본토를 노린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에만 국가역량을 쏟아부었기 때문
 - 이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북한이 경제난을 돌파하려면 핵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를 위해선 대미외교가 관건인데, 당 대회 개최란 미봉책으로 한계가 클 수밖에 없을 것임

② 노동당 內 군부 의석 축소

- 8차 대회의 참석자를 보면, 다른 부문 대표들은 최대 2배까지 늘어난 데 비해, 군부 의석만 대폭 줄어든 걸로 확인
- 제7차 대회에 비해 전국 각 조직의 당 대표자 內 군인 대표의 수가 총 719석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8명으로 나타남
 - 반면, 핵심당원 대표의 수는 786석에서 1,455석으로, 행정경제 부문 대표도 423석에서 801석으로, 그리고 정치부문 대표도 1,545석에서 1,959석으로 증가

〈그림 1-1〉 당대회 7, 8차 참석 구성원 비교



*출처: 연합뉴스 (2021. 1. 6.)

- 주목할만한 것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제를 폐지하고, 민간 출신 박봉주 내각총리를 군사위원으로 선출했다는 점
 -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김정은의 軍 장악력 강화로 평가하며, “군의 역할 축소와 함께 당의 역할 강화”의 의미로 해석
 - 브룩스 前 주한미군 사령관도 김정은 권력구조 재편과 연계시키며, “당과 국가정책 시행에서 군부의 영향력 축소 조치”로 평가
 - 즉, “한정된 자원을 군부에 지나치게 투입해선 경제난 극복이 어려워, 당내 군부의 반대 목소리 약화를 위한 영향력 축소 과정”으로 분석
- 일각에선 이는 분명 ‘선군정치’나 ‘핵·경제 병진노선’과 다른 접근이긴 하나, 그럼에도 “아직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건 성급하다”고 경계
 - 크리스토퍼 힐(前 6자회담 대표)은 “군부 세력의 축소는 ‘선군정치’에서 ‘경제우선’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으나,”
 - “핵-미사일 정책 등 ‘핵무력 병진노선’과 관련된 측면을 놓고, 현 시점에서 노선 변화로 보기에선 여전히 무리가 있다”고 강조

- 세이모어(前 백악관 WMD 조정관)도 “군부 입지의 변화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편이지, 핵미사일 정책의 변화로 볼수 없다”고 평가

③ 당규약 개정 관련

- 북한은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 구현을 위한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정식화”
 -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식화한 것은 핵무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과거 고난의 행군기 정립했던 선군정치로 인민들을 제약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
 - 오히려 당의 존재 이유는 ‘인민’과 ‘애민’에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판단
-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에서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의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통일전선전술의 변화를 의미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를 삭제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으로 바꾼 것은 군사우위에 입각한 통일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임
 - 이는 당장 통일을 추진한다기보다 군사 강국이 돼 체제안정을 도모한 후,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위장평화 공세를 통한 통일전선전술의 변화로 해석 가능
- 한편, 김정은의 유일영도체제 강화를 위해 정치국, 중앙군사위, 중앙검사위 등의 탄력적 운영방침도 결정

- “당수반 영도를 원만하게 보좌하며 당사업과 활동을 민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주요결정을 당겨할 수 있고”, 또한 당중앙검사위 권한도 대폭 강화
- 아울러, 당대회 소집을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당중앙검사위는 당 전원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변경
- 당기관 및 정치조직의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부르지 않도록 하고, 기존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호칭
- 이와 함께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호칭하도록 조정하면서, 향후 북한에서 ‘위원장’은 김정은의 직함으로만 사용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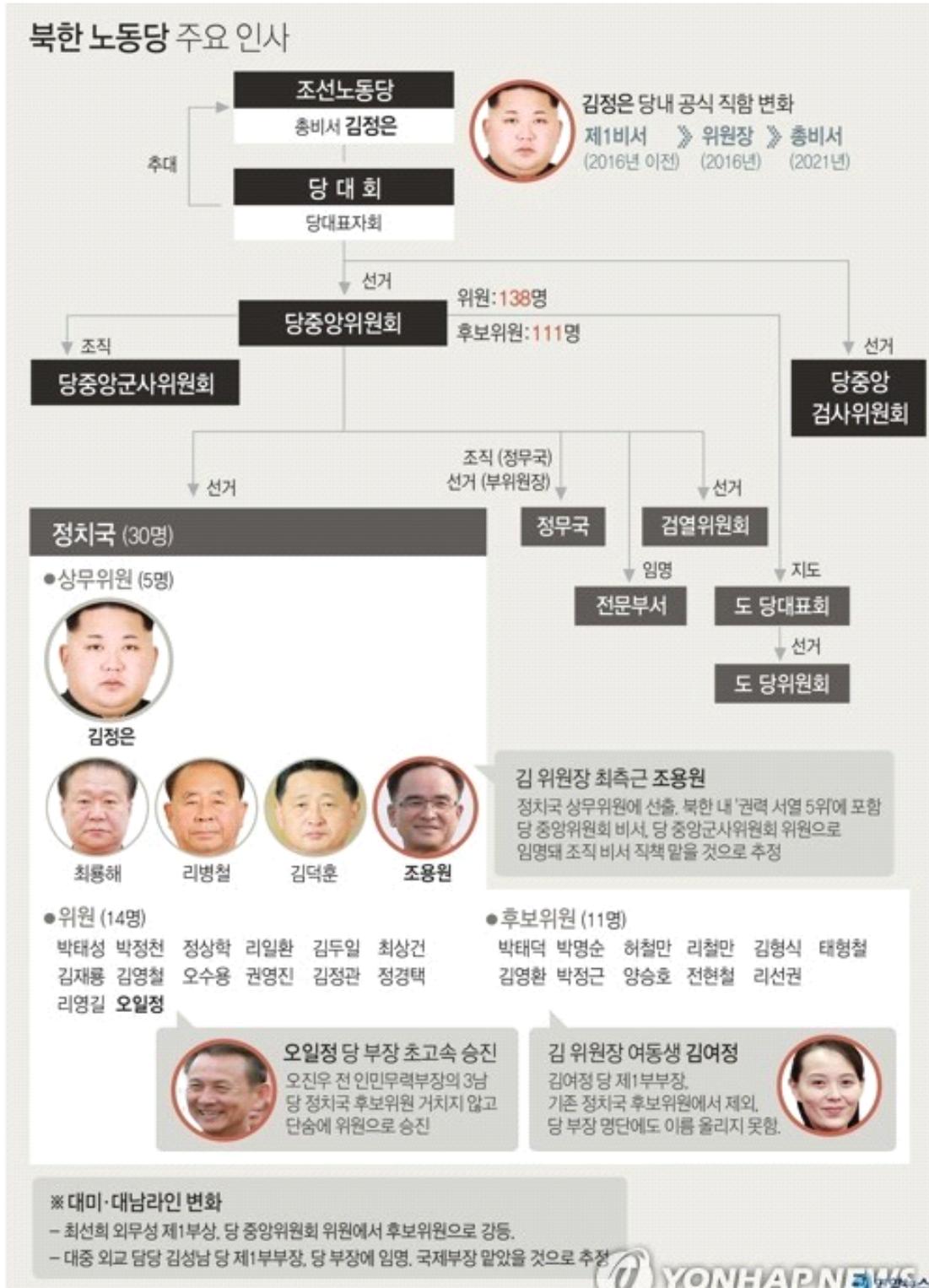
④ 김정은 총비서 추대 및 조직 개편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1.10)되면서, 북한은 명실상부한 ‘당-국가체제의 정상화’를 선언
 - 김정은의 당내 직함은 집권 초 ‘제1비서’에서 2016년 ‘위원장’으로, 이번에는 ‘총비서’로 바뀌면서, 드디어 “김정은 유일집권체제”를 완성
 - 과거 김정일에게 부여했던 정치적 상징인 ‘총비서’ 직책을 김정은이 직접 맡음으로써,³⁾ 이제 공히 노동당의 최고지도자임을 명확히 함
- 이번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은 김정은의 최측근인 조용원으로, 각종 요직을 맡으며 북한 내 ‘권력 서열 5위’로 등극
 -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돼, 상무위원회는 김정은과 기존 최룡해·리병철·김덕훈·조용원 등 총 5명으로 구성

3) 태영호 의원(1.12)에 따르면, 김정은이 당 직함을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바꾼 이유는 위원장보다 총비서라는 직함이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강화하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 즉, 위원장이란 직함은 당조직에서 흔하지만, 총비서라는 직함은 유일하기 때문임.

- 이외에 조용원은 당 중앙위 비서와 당 중앙군사위 위원 등에도 임명돼 조직 비서 직책까지 꺾찬 것으로 관측
 - 다소 이례적인 것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점임
 - 이는 김여정의 실각이나 위상 변화라기보다, ‘2인자’나 ‘후계구도’니 하는 세간의 평가를 인식한 ‘속도 조절’ 차원의 조치란 평가가 우세
- 한편 對美-對南 라인에 대한 인사이동 역시 이례적이란 평가가 우세
- 대미 라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고, 대중 외교를 담당해 온 김성남 국제부 1부부장이 국제부장으로 승진 임명
 - 대남 총괄인 김영철 당 부위원장도 당 비서에서 제외되고 부장에만 이름을 올려, 북한이 대남 비서를 없애고 부장만 남긴 걸로 추정
 - 대남 담당이었던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부장단 명단에서 빠짐
- 이렇게 볼 때, 북한은 기존 10명이던 부위원장을 7명 구성의 비서 체제로 줄였는데, 인물을 보면 대남과 외교 담당을 없앤 걸로 보임
- 정치국 상무위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명을 유지했고, 위원은 상무위원을 포함해 19명, 후보위원은 11명으로 결정
 - 아울러,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138명으로, 후보위원은 111명으로 결정
 - 기타 주목할만한 것은 인민무력상의 명칭을 ‘국방상’으로 바꾼 것과 총정치국장이 김수길에서 권영전으로 교체된 것 등임

〈그림 1-2〉 노동당 주요인사 명단



*출처: 연합뉴스(2021. 1. 11.)

3. 향후 정세 전망

- 김정은이 총비서에 등극하며 ‘김정은 유일집권체제’를 공식화한 바, 내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선당정치, 애민정치 드라이브”가 예상
 - 개회사에서 “경제부문의 실패를 자인하고 원인을 ‘내부’서 찾고 있어”,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조만간 쏟아낼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북한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제재와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버전의 <정면돌파전 2.0>을 제시할 수 있음
 - ※ 내각의 사업별 집행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발전 청사진으로 10대 ‘중장기’ 전망목표를 제시, 새로운 연속적 속도전 창출 시도도 예상
 - 또한, 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제시한 걸로 볼 때, ‘인민’과 ‘애민정치’의 행보가 강화될 것임
 - 김정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정부 관리들을 전국 각지로 파견했다”고 언급한 것도 ‘애민 지도자’로서의 모습 강화 차원
- 그런데 이런 ‘애민정치’의 성공을 위해선 경제난 해결이 필수적이고, 이는 곧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제재완화 또는 해제’에서 비롯됨
 - 그러나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적대시정책 철회’와 ‘핵역량 강화’를 선언한 상황이라, 당분간 미북관계 모멘텀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임
 - ※ 김정은은 1.9(토) 사업총화 보고에서 비핵화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핵을 36번이나 언급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국정운영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
 - 특히, SLBM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며, “핵잠수함 보유 과업이 상정되었고, 현재 설계를 마치고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언급해, 미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리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도 전통적 방식인 긴장과 협박, 도발을 증대시키며 정치경제적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 신행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
- 한편, 남북관계 관련 김정은은 “2018년 판문점선언 전으로 돌아갔고, 남한이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외면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
 - 이런 김정은의 대남 발언은 文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만남도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임
 - 특히,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이 비정상적이고 반통일적인 세력들을 엄중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혀, 일각에선 <제2의 김여정 하명법>을 지시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
- 현대 더 큰 문제는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 △군사력 강화를 통한 통일추진, △열병식 임박 정황까지 공개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신년사(1.11)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란 미몽에 빠져 있음
 - 김정은이 핵능력 고도화와 남한타격용 전술핵무기 개발까지 지시한 상황에도 文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메아리 없는 허망한 독백을 외침
 - 이는 자주권 존중, 즉 핵무력을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개선은 없다고 선언한 김정은에 대해 평화와 공존을 병적으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
- 종합하면, 이번 8차 당대회는 김정은 유일체제를 공식화하는 자리이며, 그의 결사옹위를 위해 핵무력 고도화를 대내외에 천명했고, 특히 대미-대남 압박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

II.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작성: 김창배 경제정책실 실장 (kim.chang.bae@ydi.or.kr)

인구감소는 경제절벽, 재정고갈, 지방소멸 등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재앙. 하지만 정부의 인구대응·대책은 위기의식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안일. 사상 처음 인구감소 통계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시사. ▽세금퍼붓기 출산대책을 지양하고 결혼·출산 의욕을 고취하는 사회환경 및 구조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 적극적 이민정책 등을 통한 노동 투입 감소 상쇄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주택·복지·연금 정책 정비 ▽지속 가능 시장형 일자리 창출로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환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안함

1. 현황: 2020년 주민등록 인구, 사상 처음으로 감소

□ ‘인구 레드 크로스(dead cross)’⁴⁾발생⁴⁾, 1인 가구 39.2%로 증가

※ 출생아가 사망자에 미달해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9,023명으로 2019년 (51,849,861명) 대비 20,838명 감소

- 2020년 출생자 수는 30만 명이 붕괴되어 역대 최저치(275,815명)로 하락한 데 기인

○ 1인 세대는 증가한 반면 4인 세대는 감소세 지속

- 전체 세대는 2020년에는 23,093,108세대를 기록하며 2019년 대비

4)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변동'

큰 폭(611,642세대, 2.72%) 증가

- 1인 세대는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9,063,362세대, 39.2%)를 돌파
- 1, 2인세대는 전체의 62.6%

□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

- 이민자 유입이 없다면 노동력 감소 → 생산 및 소득 감소 → 소비 위축 등 경제절벽의 악순환 초래
- 또한 급속한 고령화는 노령인구에 대한 젊은 층의 연금과 복지 부양 부담 급증을 초래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
-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의 기력을 떨어뜨려 지방 소멸,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

〈표 II-1〉 생산연령인구의 노년부양비

단위: 명

	2018년	2030년	2050년	2067년
총부양비	19.6	38.2	77.6	102.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 노년부양비 :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중

2. 문제점 : 정부 대응에 위기 의식 부재

□ 영아수당, 출산 지원금 확대 등 단기 땀질 처방에 급급

○ 여전히 정부는 ▽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30만원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내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⁵⁾

- 지난 15년 동안 무려 180조원을 쏟아 붓고도 성과를 못낸 기존 대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
- 반면 출산의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및 환경(일자리, 주거, 교육 등)의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로 낮아진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의 추가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일뿐

※ 합계출산율 :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 2018년 기준 OECD 37국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에 크게 밑도는 수치

〈표 II-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합계출산율	2.82	1.57	1.48	1.23	1.24	0.98	0.9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5)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2021~2025년)

□ ‘노인 알바’와 같은 땀질 처방만 남발

- 공공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고령자 고용은 오름세이지만 주로 단순노무 업종에 치중하면서 노인 빈곤율 개선에 한계
 -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35.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6%), 서비스·판매 종사자(17.7%),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3.5%) 순으로 나타남⁶⁾
 -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소득향상 효과는 제한적

〈표 11-3〉 2019년 고령자(65세 이상)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

	취업자	비중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65세 이상	2,538	5.5	3.0	17.7	24.6	13.5	35.8
전체	27,123	22.0	17.5	22.7	4.9	19.9	13.0

자료: 통계청

- 2018년 기준 66세 이상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집계
 - 이 수치는 15~64세의 상대적 빈곤율(11.8%)보다 4배 가까이 높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
 - 2017년 기준 한국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0%로 미국(23.1%), 독일(10.2%) 프랑스(3.6%), 노르웨이(4.3%) 등을 크게 상회
 - ※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 비중

6)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 연금개혁 방치하며 재정고갈 외면

- 고령인구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개혁은 2년이나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않고 무책임하게 차기 정부로 이월
 - 2018년 4가지 연금개혁방안⁷⁾을 담은 정부의 국민연금종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
 - 이후 정부와 국회가 단일안 마련을 서로 떠넘기면서 연금개혁은 공회전만 거듭
 -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추가로 내놓을 안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연금 개혁은 사실상 좌초
- 이러한 사이에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시기는 점점 빨라짐
 - 국회예산정책처(2020년)에 따르면 연금개혁 못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이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예상되었던 고갈시점 2057년에 비해 2년 앞당겨진 것

□ 1인 가구 급증에 대한 대책 미흡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돌봄, 고독사 예방 등 한정된 영역에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계층 및 형태의 1인가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미흡
 - ※ 1인 가구 비중: 33.3%(2010년) → 39.2%(2020년)
- 또한 1인 가구의 급증추세를 도외시 한 채 수요억제 일변도의 규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주거복지가 악화됨

7) 현행 유지를 포함해 보험료율을 12~13%,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리는 것이 핵심.

3. 시사점 :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정책방향 대전환 시급

□ 실패한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육아·출산 여건 개선을 넘어 주거, 취업, 교육 불안 등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그 영향이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 강화

○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노력 강화

- 직업 훈련 및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강화

- 노사관계 정상화, 법·제도 선진화, 기술친화적 정책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 제고

○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취업교육 강화

○ 적극적 이민정책 추진

-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자본스톡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주택·복지·연금 정책의 정비

○ (주택) 수요기반의 점진적 약화 가능성을 감안해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직주근접이 용이한 도심개발로 주택 공급정책을 전환

○ (복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급자 급증에 대비한 증장기적인 ‘지출 관리 및 수익창출’ 방안 마련

- 한편 고령자들을 위한 중요한 노후안전망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는 포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될 필요⁸⁾

○ (연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약화를 국민에게 알리고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⁹⁾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정부나 국회가 연금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에 주목할 필요

〈표 11-4〉 주요국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사례¹⁰⁾

국가	개혁 내용	주체	사회적 합의
영국	수급개시 연령을 2027년까지 67세로 상향	정부, 위원회	제3의 기구인 ‘연금위원회’ 활용
스웨덴	1998년 급여수준을 조절하는 ‘자동재정균형조정장치’ 도입	의회	정당 간의 합의 도출
일본	2004년부터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매년 0.345%씩 인상	정부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독일	2029년까지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로 상향	정부	노조와 전문가 활용
캐나다	2019년~2023년 보험료율 9.9%→11.9%로 인상, 소득대체율도 동반 인상	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 협상

8) 국회입법조사처, 『2020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4권』

9)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급개시 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조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

10) 국민연금연구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2019)

□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의 전환

- 노인 일자리의 활성화가 단순 노인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의 인력 활용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
 - 고령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민간 일자리, 그리고 단순 복지형 공공 일자리에 몰리는 것은 국가적 낭비
- 공공일자리 확충보다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함
 - 그래야 소모성 공공일자리가 아닌 인적자본이 개발되고 시장수요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이 가능
-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 개선 필요
 - 임금 체계, 취업자 연령에 관한 제도, 취업알선제도 등 개선

Ⅲ.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작성: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모빌리티 산업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면서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두 가지 도전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념. 현재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경계가 의미 없는 파괴적 혁신이 만들어 내는 산업-생활-정부 간 상호연계의 형태로 규정됨.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2030', '모빌리티 2040'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 연결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함

1.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

□ 모빌리티 산업 성장 배경인 규제와 ESG¹¹⁾

-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규제가 전 세계 국가에서 강화되면서 기업 활동에서 ESG가 기업 및 조직의 사회적 책임으로 요구
- 온라인 및 인터넷 사용량 증가, 정부 주도의 지원 확대, 사용자 편의 및 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요구는 모빌리티 기술 투자 및 벤처기업들 급증의 밑바탕이 되고 있음

□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현황¹²⁾

- 11)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 12) 본고에서는 모빌리티 산업 규모 예측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인용하지 않고, 모빌리티 산업의 벤처기업 투자에 중점을 둬 KPMG, *Mobility 2030: Transforming the mobility landscape (2019)*, McKinsey & Company, *Start me up: Where mobility investments are going (2019)*

- 지난 10년간 범세계적으로 약 \$2200억 달러가 사람과 사물의 동력을 이용한 이동 역량 관련 사업과 기술에 투자되고 있으며, 그중 2019년 한 해에만 \$33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음
- 그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여행 및 모빌리티 분야의 유니콘¹³⁾ 기업의 수가 2018년 22개에서 2019년에 44개로 2배 증가함
 - 모빌리티 분야의 유니콘 범주를 보면,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 11개(25%), 자율 주행차 19개(22.7%), 마이크로 모빌리티 3개(6.8%), 나머지 20개는 여행, 호텔, 도서 등임
- 2010년 이후 모빌리티 산업에서 투자 추이를 보면, 2010년에서 2016년 중반까지 \$1000억의 자금이 투자되고, 그 이후 휴면기를 거쳐서 2018년 이후 또다시 급격하게 증가 되고, 2019년에는 글로벌 컨설팅업체들이 모빌리티 2030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느라 경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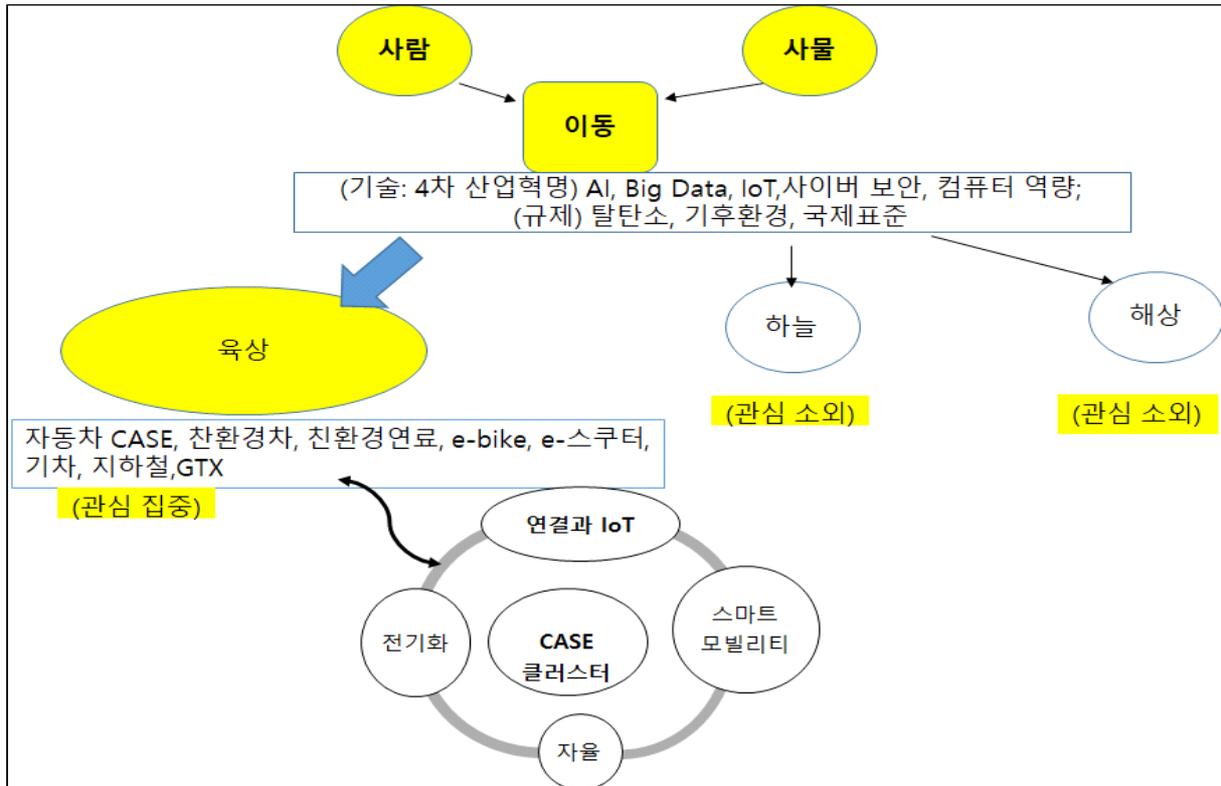
□ 모빌리티 산업의 과거

-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투자 구조변화를 고려하면, 모빌리티 산업의 전개를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음
- 과거 모빌리티 산업은 <그림 III-1>에서보듯이 동력을 이용하는 하늘과 해상을 제외한 육상 교통의 개인과 사물의 이동 수단인 자동차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
 - 즉 연결, 자율, 공유, 전기 (CASE: Connected, Autonomous, Smart(or shared), and Electric)로 이루어진 자동차 생태계의 확장

13)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민간 소유 스타트업 기업

시스템, 그리고 마이크로 모빌리티(전동 키포드, 전동 스쿠터, 전동 자전거) 등으로 구성

〈그림 III-1〉 과거 모빌리티 생태계



- CASE의 각 클러스터가 형성되는데 핵심적인 두 가지 구성요소, 즉 사이버보안(cybersecurity)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또한,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대중교통(기차, 광역 지하철, 지하철, 버스 등)과 결합하게 되면, 대도시의 교통, 주택, 건축 등의 변화를 통해 대도시의 교통체증, 공기 오염 등 도시 생태계를 변화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임

○ 2030년까지 CASE 영역에서 전망되는 투자는 \$700억달러(약 77조 원)에 달하므로 협력이 생존의 키워드

- 기존 자동차 완성차 업체 혼자 CASE 클러스터의 4가지 모든 영역에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

□ 파괴적 혁신을 위한 모빌리티산업의 방향

- 자동차 생태계만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각 산업의 상호연계 속에 봐야 함

- 기술 및 산업의 경계에 대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로 인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모습은 <그림 III-2>와 같이 육상, 하늘, 해상에서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포괄하게 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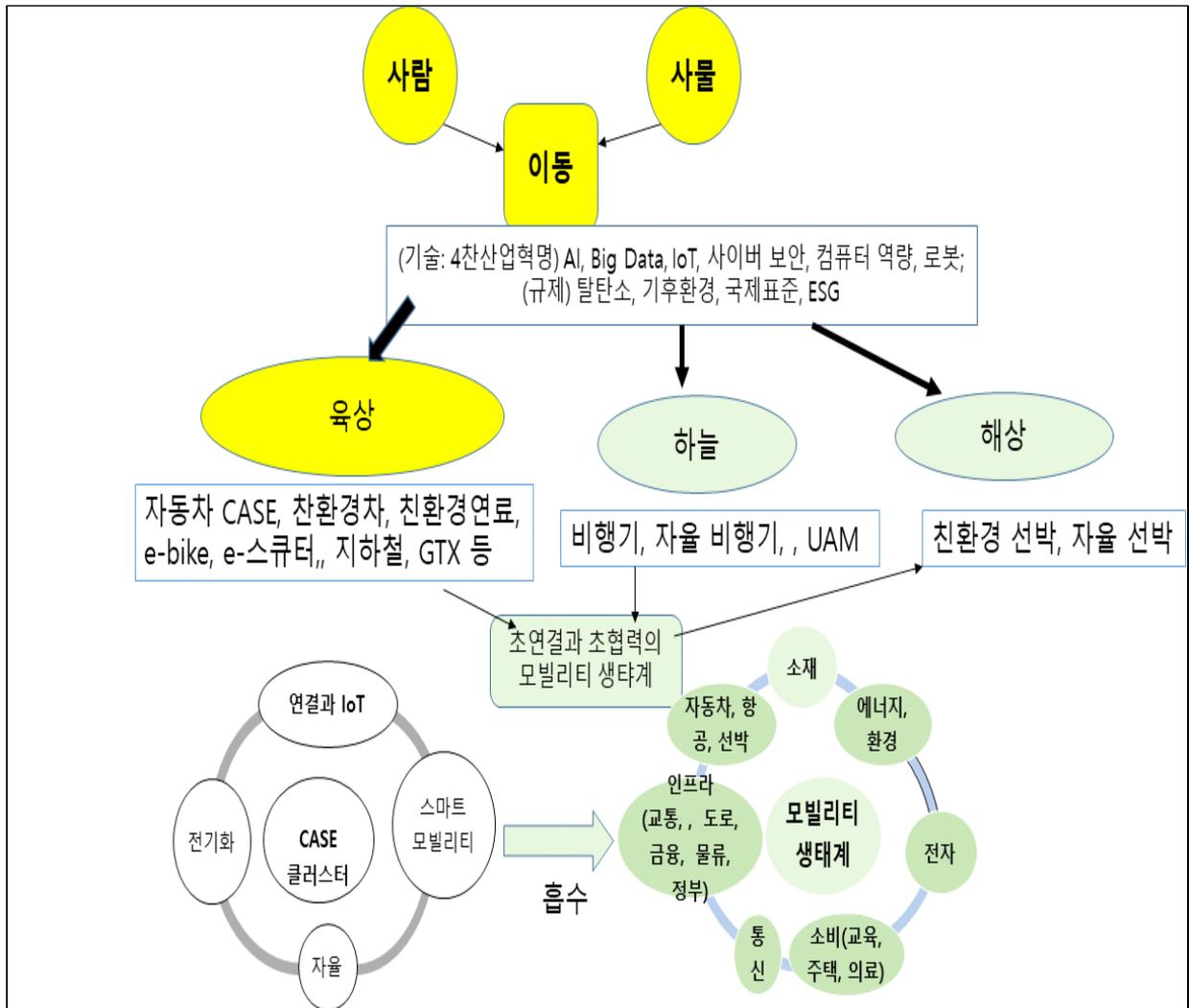
-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초기 한정된 모빌리티 영역을 넘어서게 되어, <그림 III-1>에서의 ‘CASE 클러스터’는 모빌리티 생태계로 흡수됨

- 투자 금액 및 스타트업 기업 수의 증가를 보면, 모빌리티 생태계는 초기 도입기의 임계점을 넘어 가속 성장과 확산 국면에 진입

- ‘자율’과 ‘탄소 절감’은 육상뿐만 아니라 하늘길을 이용하는 UAM(Urban Aviation Mobility, 도시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해상 모빌리티에서도 적용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 중 한 곳은 2020년에 미래 매출 구성을 자동차 50%, UAM 30%, 로봇 20%로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을 발표함

〈그림 III-2〉 현재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 4차 산업혁명의 수단들이 만들어 낸 정치-경제-사회의 역할 변화 모습을 예측 가능케 함
 - 모빌리티 생태계는 자동차 산업의 확장이 아니라, 산업과 생활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국가 성장 원천의 구조변화로서 작용하기 때문
- 또한 모빌리티 생태계는 국내 및 해외 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치-경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낼 외교적 및 정치적 역량을 갖춘 국가에서 번영할 수 있음

□ 기업들, 모빌리티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기여

- 주요 기업들이 국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모빌리티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이바지하고 있음
 - 실례로 말레이시아에서 창업된 택시 공유업체 그랩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 도요타 등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음¹⁴⁾

□ 모빌리티 생태계 형성과 정부의 역할

- 정치-경제-사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모빌리티 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과 새로운 사업 영역의 등장은 불가피하기 때문
-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
 - 첫째, 투자 성과의 불확실성 경감 및 위험에 대한 정부 지원
 - 모빌리티 생태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경기변동, 금융 위기, 전염병 위기(코로나 19와 같은 상황) 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발생이 불가피
 - 둘째, 입법 및 제도정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지원
 - 모빌리티 생태계가 국내 및 해외에서 경제에 내재화되는 과정에는 새로운 산업 규율(새로운 법률 체계)이 필요

14) 이재용 "생존의 문제다"...'뉴 삼성' AI·6G 미래기술 선점 속도 (출처: 뉴시스(2021.1.6.))

2.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사례

□ 영국: 정부-기업 협업으로 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Top 3 목표

-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를 주도하고 있지만, 영국¹⁵⁾의 모빌리티를 주도 하는 정부 기관은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이 부서는 모빌리티 미래를 창출하는데 영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비전으로 접근하고 있음
 - Oxfordshire주의 ‘Oxfordshire Transformative Technology Alliance’가 ‘연결 및 자율(connected& autonomous) 운송수단’ 분야에서 2040년까지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톱 3개 중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
- 영국의 미래를 위해 AI와 데이터를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 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을 통한 모빌리티 지원·육성

- 케렌 하이소드(Karen Hayesod)¹⁶⁾와 이스라엘 총리실이 공동으로 Smart Mobility Initiative를 주관하여 2013년부터 매년 12월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Smart Mobility Summit)’ 주간을 개최
- 그 서밋의 주요 행사인 경축 행사(Gala)에서는 그 해 그 분야의 탁월한 연구자들로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1백만 달러의 삼손-총리상

15) <https://industrialstrategy.blog.gov.uk/category/grand-challenges/mobility/>

16)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일하는 Keren Hayesod-UIA (United Israel Appeal) 재단은 범세계적으로 조직된 유대인 공동체(Jewish community)와 파트너십으로 이스라엘 국가와 사회의 국민적 최우선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일하는 단체,

(SAMSON-PRIME MINISTER's PRIZE) 수여

- 2013년 이후 6년 동안, 200개가 넘는 기업들(주로 스타트업)이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에 참여하여, 대체연료,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 자동차 및 기타 제품들을 전시해 옴
 - 매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서밋에 출시되는 기술은 모빌리티 생태계 및 CASE 기술을 응용하는 기업들에게 제공
 - 모빌리티 관련 벤처는 300개가 넘으며, 2010년 이후 2020년 6월까지 관련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금액이 \$184억(약 20.2조 원)에 달함
- 모빌리티 창업에서 정부와 軍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
 - 첫째, 모빌리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 둘째, 수출기관, Start-Up National Central,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의 당국의 적극적 투자 및 투자 유치 지원
 - 셋째, 좁은 영토, 적은 인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IoT, AI, 보안 관련 첨단 기술 개발
 - 넷째, 이스라엘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군 시스템¹⁷⁾ 보유

17) 한국의 군 문화가 많은 벤처기업 배출의 근간이 되지 못하고, 군이 사용하는 기술이 첨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 이스라엘은 사관학교가 없고, 2005년부터 공군 조종사 배출을 위한 3년제 아카데미만 운용

3.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모빌리티 2030’, ‘모빌리티 2040’ 비전을 구축

○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은 국가미래 운명과 직결

- 생태계의 연결 가능한 수많은 기회 중에서 누가 기회를 선점하여, 국민이 소망하는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느냐에 국가 경제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
- 모빌리티 산업이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산업을 변모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로 인해 인류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음

○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모빌리티 생태계 형성에 적극 대응

- 해외에서 기업의 적극적 인수 및 합병, 해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기업 설립 등을 통해 모빌리티 사회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 정부의 모빌리티 산업 비전과 전략은 전무¹⁸⁾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타다’ 허가를 위해 한시적으로 출범한 것이고 다른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공정, 정의, 공평’ 등의 규범적 이슈에 몰입
- 개인이 타고난 소질과 역량이 다른데, 공정과 공평을 강조해서는

18) 해외 선진국의 정치,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국내 기업,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빌리티의 확장 범의 및 속도에 비교하면, 한국의 정치 및 정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성장성과 가치에 대한 공유지식이 미흡함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육성하고 보급하는 게 불가능함

- 모빌리티 생태계 관련 산업이 다른 선도 국가보다 뒤처지지 않고
더 빨리 발전하려면, 우선 2021년 기점으로 10년, 20년 뒤의 ‘모빌
리티 2030’, ‘모빌리티 2040’의 비전을 제시해야 함
- 모빌리티 생태계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제적 선도자가 될 기회를
잡기 위한 비전이어야 함

□ 정부의 역할

- 모빌리티의 핵심은 시장확장을 위한 연결과 통합이며, 그 경쟁력은
정부 및 정치의 제도 구축 역량에서 나오게 됨
- <그림 III-2>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글로벌
경쟁력은 한 기업의 힘만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 불가능
- 산업간 다양한 역량의 결합이 필요하므로 기업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 정부는 모빌리티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기초·기술 인력 육성의
교육정책,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
- 모빌리티 산업의 비전 설정 그리고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은 지속적인
기초 과학, 응용과학 및 개발 투자 증가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가능할 것임
- 모빌리티 산업은 그 기초 기술인 AI, IoT,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분산 컴퓨팅과 컴퓨팅 능력 등에 대한 인적 자원의 역량 위에서 번성하고, 이러한 기초기술은 그 분야의 재능이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고급기술 인력에 의해서만 가능

□ 국회의 역할

- 각 분야별 모빌리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규의 연구와 입법에 적극적인 지원
 - 각 산업이 연결된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려면 현재 법규에서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
 - 또한 도시-부동산-모빌리티 연결은 문재인 정부의 24번이나 실패하는 부동산 정책보다 기존 도시의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교육, 주택, 환경오염 감소 등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성장·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책임 감수: 나경태 사회정책실 실장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순, 2019.8.29.~現在)

이슈브리프 2020-16 (발간일: 2020.12.24)

- ▶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이슈브리프 2020-15 (발간일: 2020.12.10)

- ▶ 서울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니즈와 시사점 ▶ 주거권보장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필요성과 과제

이슈브리프 2020-14 (발간일: 2020.11.28)

- ▶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이슈브리프 2020-13 (발간일: 2020.11.12)

- ▶ 2020 美 대선 결과분석: 평가, 전망, 대응 ▶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 ▶ 임대차2법發 전월세대란: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이슈브리프 2020-12 (발간일: 2020.10.29)

- ▶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11 (발간일: 2020.10.15)

- ▶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이슈브리프 2020-10 (발간일: 2020.9.28)

- ▶ 전월세전환율 2.5% 강제인하의 타당성 검토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유통정책 제언
- ▶ 포털 SI알고리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20-09 (발간일: 2020.9.17)

- ▶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 ▶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8 (발간일: 2020.8.13)

- ▶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 ▶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이슈브리프 2020-07 (발간일: 2020.7.23)

-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6 (발간일: 2020.6.25)

- ▶ 악화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 ▶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 ▶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 ▶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 ▶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반'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핑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악(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 미국궤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9)

-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